

서울시, 불법대부업 단속 고삐... 등록취소 111건, 영업정지 175건

광고 모니터링·단속·지도점검 진행
경제적 취약계층 실질적 구제 힘써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단속에 고삐를 풀었다.

서울시는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지도·단속, 사후구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42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유발 업체, 장기 미수검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 75건, 등록취소 12건, 과태료 176건 등 총 42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우선 시는 대부업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치구와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를 점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자치구 담당부서나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발견해 결과물을 제출하면 시가 1주 이내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에

(불법대부업체 점검 실적) (단위: 개소)

점검연도	점검업체	행정조치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2016년	1,319	615	351	41	37	181	5
2017년	800	606	287	59	62	185	13
2018년	427	421	176	75	12	150	8

(자료=서울시)

대한 이용정지를 중앙전과관리소에 의뢰한다. 강제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포킬러를 통해 통화를 차단한다.

대포킬러는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 등에 있는 번호로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업자와 통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는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44건에 대해 중앙전과관리

소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대포킬러로 1434건의 통화를 원천 차단했다.

시는 “불법 대부업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일부 자치구의 협조 미흡으로 불법대부업 전단지 광고 점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홍보와 자치구 협조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부업자의 직권말소를 위한 일제 단속

에 나선다. 시는 소재지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발송되지 않거나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영업하지 않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처분한다.

시는 “불법대부업체가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부업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9월 대부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단속 계획을 수립,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업법 위반 의심업체, 장기 미수검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자치구와 ▲법정 최고금리 24% 준수 여부 ▲이자율·자필서명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준수 여부 ▲계약 및 대부광고 적정성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총 2546곳의 업체에 164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점검 결과 과태료 814건, 영업정지 175건, 등록취소 111건의 행정처분과 26건의 수사의뢰, 미

마한 건에 대한 행정지도 516건 등 총 1642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불법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한다.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 센터를 통해 지난 2018년 총 484회의 민원 상담을 실시해 3억6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으로 불법대부업체 수도 줄고 있다. ‘서울시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 2016년 3164개 2017년 2890개에서 2018년 2682개로 482개 줄었다. 최근 3년 동안 15.2% 감소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 단속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중 단속으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시민들의 일상 함께한 ‘추억 담긴 가게’

보존가치·상징성 있는 50곳 발굴
점포별 홍보·인테리어 비용 지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해 온 보존가치가 크고 상징성 있는 ‘추억 담긴 가게’ 50곳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최초 여성이발사가 운영하는 성북구 ‘새이용원’, 1975년 문을 연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전문점 서대문구 ‘미네르바’, 필름 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까지 우리나라 사진역사의 산증인인 부자가 함께 운영하는 강북구 ‘서울사진관’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추억 담긴 가게들은 문을 연 지 5년 이상 된 가게로 역사성, 전문성, 창조성, 예술성, 상징성 등을 지니고 지역·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곳



추억 담긴 가게로 선정된 성북구 새이용원. /서울시

이다. 경영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업주의 참여의지, 가게 보존의지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들 가게에 점포별로 최대 200만원의 홍보비와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홍보는 업주가 원하는 방

식으로 하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치구와 협력해 추진한다.

또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를 매칭해 가게 인테리어부터 제품개발,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예술전공 청년이 가게의 간판, 벽화,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공간 리모델링, 명함·로고·상품패키지 개발로 가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추억 담긴 가게는 생존의 중심에 서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세대 간 추억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며 “지역과 시민, 업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여의도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2019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국어 업무평가 ‘최우수’ 선정

임정 100주년 언어 속 일제잔재 청산
관행 남아... 순화어 100개 발표 보급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년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여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해 1년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국어문화 진흥사업, 경기도 수어교육원 운영 등을 추진해 올바른 언어 사용과 도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국어문화원(한양대 에리카캠퍼스)과 지역 방송사가 협업해 청소년을 위한 영상콘텐츠와 외국인을 위한 영상콘텐츠를 각각 8편씩 제작 보급하는 등 국어문화 진흥사업을 진행했다.

청소년용 영상은 비속어 욕설로 인한 청소년 폭력예방을 다뤘으며, 외국인용은 외국인이 틀리기 쉬운 한국어 문법과 발음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둘 다 드라



마 형식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었으며 경기도 홈페이지도 유튜브를 통해 시청도 가능하고 활용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언어 속 일제잔재 청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도 공문서 등에 일제잔재 표현과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민간기관과 국어학자 등 전문가와 추진단을 구성해 일본식 표현을 전수조사하고, 순화어 100개를 발표해 보급하는 등 언어 속 일제잔재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진단을 구성해 5월부터 잔재 청산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찾동 2.0’ 본격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행정 문턱 낮추고 자발적 참여 지원
‘시민찾동이’ 누구나 가능... 신청 받아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찾동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의 문턱을 낮춰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 주민결정력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시는 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이웃인 ‘시민찾동이’ 사업을 실시한다. 어려운 시민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계하는 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한다. 시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시민찾동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한 시민에게는 ‘시민찾동이 신분증’을 발급해준다. 영화관 티켓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주민, 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과 만나 인사하며 지내기 위한 골목 반상회를 제안할 수 있고, 골목 단위 관심사에 대한 주민회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이달 중 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신설되는 ‘골목회의 제안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회의는 카페, 마을활력소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나 SNS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주민자치기구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까지 424개동에서 전면 실시한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

예산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9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다목적홀에서 찾동 2.0 출범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청장, 시의원, 찾동 추진지원단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의 문제들을 촘촘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것은 공공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살고 공동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서로의 관계망 속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는 찾동 현장을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골목 단위 협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